

만일 행자부가 전북의 입찰을 직권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경제의 약 80% 정도가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때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 사회를 부지불식간에 휘감고 있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과 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체결된 한·칠레FTA가 농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의 국회 비준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한국이라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벗어나 전 세계가 하나로 압축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춰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 of Brand)을 잃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색깔을 가지고 그 독창성과 창의성을 상품화하여 세계적 브랜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했던 것만큼 어려운 지방분권의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례 하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년 전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WTO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국이 온통 혼돈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일찍이 대비를 해오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고 있던 대표단의 무능력까지 성토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국내뉴스는 ‘정부가 이미 예정되었던 농업개방추세에 사전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으로 모아졌고 농민단체들은 전국 규모의 집회·시위를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서울로 향하는 농민들을 막아 세우고 ‘참자.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데모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농민회가 구성되었고 급기야는 서울로 상경하여 전국단위 집회 및 시위로 연일 떠들썩했다. 필자도 금산군에 근무하면서 서울로 상경하려는 농민들을 붙잡고 또는 버스를 가로 막으며 WTO체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일단 참자”고 설득했다.

이제 그 10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쌀에 대해 10년간 국내쌀 소비량의 4%만 할당제로 수입하는 『관세화유예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특세를 신설하여 40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여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WTO 협상체결 이후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적응